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값 '천차만별'

고송자 도의원 "급식센터 신설 유통비 줄여야"

전남도가 친환경 농산물과 쌀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고 있지만, 음식재료의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 공급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고송자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12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학교 급식 음식재료의 생산원가와 납품 단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공급가격 차이가 커 공급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이날 고 의원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학교급식용 무농약 음식재료의 1kg당 단가가 고춧가루는 영광지역이 1만6천원인 반면 무안지역은 3만6000원으로 무려 1만4천6000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또 예호박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5천300원, 풋고추는 가격차가 1만2천원에 이르는 등 학교급식 납품가의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 같은 가격 차를 줄이려면 유통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음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해 계약재배에 의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장, 유통비용 절감 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남도가 도내 학교에 학교급식으로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 데 이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도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센터 설립에 시·군당 10억~3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용역 결과 학교급식 지도·감독은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하고 지자체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자

참가업체 없어 입찰 무산

무안공항의 기존 면세점 철수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새로운 면세점 운영자 선정에 나섰지만, 참가 업체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남 무안공항에서 열린 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조만간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무안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개항 이후부터 면세점을 운영해왔던 한국관광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오는 9월 면세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무안공항은 개항 당시에도 공항 면세점 운영자를 공모했으나, 민간 사업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관광공사만 단독 응찰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설

나로센터, 우주항공 클러스터 중심지 돼야

1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가 됐다. 다음달 30일 발사에정인 나로호(KSLV-I)를 쏘아 올리면 자력으로 위성발사에 성공한 10번째 나라가 돼 이른바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지만 하다.

현 단계 80% 선인 국산화율을 제고해야 하고, 우주개발 선진국이 갖춰야 할 활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개발 각 부분의 국산화와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우주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과 인력육성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사체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이 한곳에 모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제각각 분산돼서는 짧은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우주산업의 핵심인 발사체가 있는 나로우주센터 일대에 조성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발사체 따로, 위성 개발 따로와 같이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이 분리돼서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함께 우주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로우주센터 일대에 우주항공클러스터가 구축돼야 '10년 내 7대 우주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두번 올리는 노후차량 감세정책

정부가 시행중인 노후차량 세제지원 정책으로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노후차량 세제지원정책은 2000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세금을 70% 깎아 주는 제도다.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문제는 정부의 '선심'으로 애꿎은 지자체들이 고스란히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세수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 없이 노후차량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입의 원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노후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한 2천477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70%를 감면한 결과 16억2천500만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감면액은

차량 대당 최고 98만 원까지였다. 전남도 역시 같은 달 면세조치로 19억9000만원의 손실이 났어졌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한푼이 아쉬운 판에 한 달 사이에 수십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내국세 감액 등 정부의 연인이 감세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라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도 22개 시·군·구의 절반만 수입의 원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들의 재정손실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대책 없는 답답한 정책이 지자체에 독(毒)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인당 개인 빚 5년만에 줄었다

3월말 현재 1,646만원

국민 1인당 개인 빚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민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가계의 재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 금융부채는 80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천억원(0.1%) 증가했다. 전기 대비 부채 증가율은 작년 6월 말 3.0%에서 9월 말 2.1%, 12월 말 0.8%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

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 부문 부채를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4천875만명)로 나눈 1인당 개인부채는 작년 말 1천65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1천646만원으로 줄었다. 1인당 개인부채가 줄어든 것은 2004년 3월 말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의 개인 금융자산은 3월 말 1천729조7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2조4천억원(3.1%) 증가했다.

1인당 금융자산은 작년 말 3천451만원에서 3월 말 3천552만원으로 101만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전남 섬지역 LPG 운송비 지원 실태조사

전남도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한 LPG 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신안군 임자면 지역의 현장조사 결과 실제 LPG 공급명세와 보조금 청구명세에 차이점이 발견돼 전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신안군을 포함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이 같은 전면 조사는 최근 전남도의회 고송자(민주노동당·비례)의원이 신안지역을 현장 방문해 실제 LPG 공급명세와 운송비 지원금 명세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한편, 섬 주민 운송비 지원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LPG가스를 사용하려면 육지보다 비싼 운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에게 LPG운송비 일부를 전담도와 일선 시·군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 화 총 보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 F A X > 227-0118	< F A X > 222-8005	< F A X >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 고 미 케 영 국 2200-521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사 회 1 부 2200-641	여 령 배 부 부 2200-679	< F A X > 227-9500	< F A X > 227-9500
사 회 1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 F A X > 222-4267	사 진 부 2200-691	< F A X > 02-773-9335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검찰, 盧 前 대통령 수사내용 왜 공개 안했나

명예훼손·역풍 우려

검찰은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고인을 비롯해 의혹에 얽힌 여러 인물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서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따로 증거를 설명하지 않는 관행도 검찰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설명보다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마당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온 국

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기는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검찰책임론'마저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금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들고 나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 등이 한 목소리로 "검찰은 고인을 욕보여선 안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밝히면 일방적으로 고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공여자의 진술 외에 강력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뇌물 의혹 사건이란 점도 검찰로 하여금 선뜻 증거를 내놓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수부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광양항 물류수송 효율성 높인다

남해고속도 연결 서측배후도로 공사 공정을 80% 순조

광양항의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장황호)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해 광양항의 물류수송을 활성화하려는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공사가 80%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총 1천884억원을 투입,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서측배후도로 공사는 전체 11.4km 구간 중 2007년 1공구(8.1km·광양항컨테이

너부두 마린센터~세풍JCT) 완공에 이어 이번 2공구(3.3km, 세풍JCT~광양IC)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돼 내년 6월 개통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광양을 도월리 서천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980m구간 중 300m 구간에는 체육공원시설을 조성, 지역주민의 '쉼터'도 탄생하게 됐다.

여수항만청은 "이 도로가 개통되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해 광양항 물류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WHO,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

(인플루엔자 경보 최고 단계)

국내는 '주의' 유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시간) 인플루엔자 경보의 최고 단계인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WHO는 10일 미국, 멕시코를 비롯해 감염자가 많은 8개국과 경보 격상 여부를 협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제네바 본부에서 마거릿 찬 사무총장 주재로 제4차 비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찬 총장은 오후 6시(한국 시각 12일 오전 1시)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플루의 경보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하고, 제약업체들에게 계절용 백신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의 대유행 선언은 1968년 홍콩에서 인플루엔자로 약 100만명이 숨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 선언과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 격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위기 경보를 현행과 같은 '주의'(Yellow)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호주, 칠레 등 남반구 국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로 환자 유입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 가을철 대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검역과 입국자 관리를 통해 해외 환자유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환자 감시, 조기진료체계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일방통행' 여전 하십니다